

#### 4. 主要 經濟 懸案

##### (1) 中長期 金融 改革案 確定

- (개요) 이번 금개위안은 정부에 의해 내용 조정을 거쳐 최종안이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
  - 금개위안중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 개혁 내용은 정부에 의한 최종 조정안이 작성되었음
- (주요 내용) 크게 4 가지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그 내용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제도의 개선, 금융산업 진입 자유화, 금융기관 퇴출 원활화, 시장정보의 효율성 등임
- (평가) 향후 1차안의 금융산업 개편 내용과의 정합성,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 경영 확립 등이 그 주요 보완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
- (전망과 과제) 최종 금융개혁안은 금년내 마련되고 일부 시행될 수 있으나, 전체적인 실행은 차기 정권에 의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
  - 금융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은 가격 자유화와 경쟁 심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, 국내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의 증대나 결합 재무제표 작성, 공시 의무 충실화 등에 대비해야 할 것임

2차 개혁안, 지난  
6월 3일 청와대  
보고

- (개요)
  - 금융개혁위원회는 6월 3일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를 확정, 청와대에 보고하였음
  - 향후 일정은 정부에 의해 내용 조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 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임
  -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 개혁 내용은 정부에 의한 최종 조정안이 작성되었음

중앙은행 및 금융 감독, 금융산업의 진입·퇴출 원활화, 시장정보의 효율성 제고 등

- (주요 내용)
  - 이번 중장기 과제의 내용은 크게 4 가지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음
  -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제도의 개선, 금융산업 진입 자유화, 금융기관의 퇴출 원활화, 시장정보의 효율성 등임
  - 최종안에서는 금개위안에 비해 재경원의 비중을 다소 상향 조정하였음
  -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제도의 개선

**금통위 의장이 한  
은 총재 겸임**

- 중앙은행의 역할을 물가안정에 둠
-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임
-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직속 행정기구로,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둠
-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韓銀에 감독 정보를 감독관청에 요구할 수 있음

**은행 소유지분,  
원칙 4% 통일, 예  
외 10% 허용**

- 금융산업의 진입 자유화
- 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현행 1인당 4%(지방은행 15%)로 통일하되 전체 은행에 대한 엄격한 사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당 한도를 10%까지 허용
- 은행과 보험은 현행 유지, 종합증권업의 최저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하향 조정
- 순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

**금융기관의 퇴출  
관련 제도의 강  
화**

- 금융기관 퇴출 원활화
- 적기서정조치제도의 확립, 인수·합병에 대한 지원 강화, 금융기관 청산·파산제 개선, 이용자 보호 강화 등
- 금융정보의 투명성 제고
- 은행 총 여신 5,000억 원이상인 계열 기업군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등

**한은의 중립적 역  
할 제고와 감독기  
능의 효율화 지향**

- (특징)
- 금통위의 위상 강화와 감독기구의 통합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지향
- 금융감독체제의 통합화는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를 수용하고 국제적인 감독 표준화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임

**중장기 개혁 과제  
는 보다 핵심적인  
성격을 띠고 있음**

- 중장기 개혁과제는 단기 개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보다 핵심적인 금융개혁 과제를 다루고 있음
- 단기 과제: 금융 산업 개편, 책임 경영 체제 확립, 금리 수수료 자유화, 해외금융 규제 완화 등

1, 2차 개혁안의  
정합성이 부족

경제정책의 우선  
순위 결정에서 재  
경원과 중앙은행  
의 협조·건제 기  
대

전문적인 개별 감  
독 기능과 시장  
자율 기능 제고  
필요

은행의 소유지분  
한도 확대와 경영  
참여 허용 바람직

○ (평가 및 보완 과제)

- 종합 평가
  - 1차 개혁안에서 다루어진 금융산업 개편안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독권 재편, 은행 소유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치우침으로써 1,2차 개혁안의 정합성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
  -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미흡
  - 제2 금융권의 대폭적인 자유화에 비해 은행권에 대한 자율 경영 확립 방안은 미흡
  -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활성화, 파생금융상품 시장 발달에 대비한 감독체계에 대한 논의 부족
- 중앙은행제도
  -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경원과 중앙은행의 상호 협조와 건제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 제고 필요
- 금융감독체계 개선
  -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가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도 있으나, 은행·증권·보험의 전문성에 의한 개별 감독기능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함
  - 시장 자율 기능의 제고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추구를 보장하는 감독기관과 업계의 연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
-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편
  -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 구조 차원보다는 자율 경영 확립을 위한 보다 폭넓은 정책금융 부담의 대폭 축소, 부실 채권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
  - 은행 소유지분의 확대 허용에 따른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에 의한 폐해 방지는 불공정 거래 차단과 건전성 감독 강화로 가능할 것임

○ (향후 전망과 기업 대응)

- 일부 금융개혁안은 금년내 시행될 수 있으나, 전체적인 시행은 차기 정권에 의해 구체화될 것으로

금리의 실질적인  
하향화, 해외 자  
금조달의 규제 완  
화 등이 기대됨

금융 산업은 가격  
자유화와 경쟁 심  
화에 직면

국내기업들은 금  
융 리스크의 증  
대, 결합채무제표  
및 공시의무 충실  
화 등

전망됨

- 금융개혁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금융정책과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안으로 판단됨
  - 금리가 실질적으로 하향 안정화됨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 - 해외 자금조달 요건도 대폭 완화될 것임
  -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  - 이에 따라, 국내 금융산업은 가격 자유화와 경쟁 심화에 직면하게 될 것임
  - 국내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의 증대나 결합 채무제표 작성, 공시 의무 충실화 등에 대비해야 할 것임
- (임진국)

<금융개혁 중장기 개혁안>

대분류	소분류	주요 내용
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제 도 개선(최 종 정부안)	중앙은행제도	·금융위 의장이 한은 총재 겸임, 통화신용정책관 런 고유 업무 확대, 한은 내부 경영 자율화
	금융감독제도	·금융감독위 설치, 한은에 은행 감독의 요청·자료 요구권만 존속.
금융산업 진 입 자유화	금융기관 소유구 조 개선	·은행의 소유지분한도 4%로 통일하되 감독 당국 의 승인시 10% 예외 인정
	진입기준 투명화	·금융기관 설립 최저 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
	금융지주회사도 입	·100% 자회사 형태의 은행·비은행 금융기관 소유 허용
금융기관 퇴 출 원활화	적기시정조치확 립	·기준의 단순화·투명화, 감독 당국의 재량권 배제
	병행 조치	·시가회계방식의 도입·정착
	금융기관 인수· 합병 원활화	·합병시 자금, 인원 정리 원활화 등 각종 지원 강 화
금융기관 청산· 파산제도 개선	·예금보험기구의 퇴출처리 전담기구화	
시장 정보의 효율성	결합채무제표	·총 은행여신 5천억 원이상의 계열기업군 작성 의무화
	외부감사제도	·12월 결산법인은 100% 수입한도제를 5년간 한 시시행
	기업공시제도	·상장 법인에 분기 보고서제 도입
	신용평가지	·CP 및 무보증 사채에 대한 발행 적격제 폐지